

사회인문학의 대화 (4)

한국 사회의 공공성과 공적 지식인\*  
: 그 구조적 특징과 변화  
- 김동춘 교수와의 대화\*\* -

대담: 박 영 도\*\*\*



인터뷰 일자: 2012년 7월 27일 15:00~18:00

장소: 성공회대학교 새천년관 7706호

**박영도** 1997년 이후에도 그런 이야기가 많았습니다만, 특히 현정권에 와서 공공성이 붕괴되었다거나 공공성을 회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매우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의 공공성의 특징과 역사, 그리고 최근 공공성의 붕괴 양상 등에 대한 말씀을 듣고자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우선 일종의 해석학적 출발점을 마련한다는 의미에서 질문 드립니다. 공공성이란 무엇이고 오늘의 맥락에서 공공성이 왜 문제가 되는 걸까요?

**김동춘** 사람에 따라 정의하기가 다 다를 텐데요, 전통적인 정의에선 공공성은 여러 사람에게 공통된다는 측면, 사적인 것이 아니라 사적인 것을 뛰어넘어서 공동체 전체와 관련된다는 의미, 혹은 다른 사람과 함께 한다는 의미, 이런 것이 다 포함되어 있지요. 저는 그런 것을 받아들 이면서 사회 다수자에 관련된 것, 그러니까 계층적으로 말해서 중간층 이하 사회 대다수 사람들에 관한 일로 확대 해석하고 싶어요. 특히 MB 정부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사적 이해관심 밖에 없는 사람들이 공적 업무를 담당함으로써 생기는 국가 혹은 관료의 사사화라는 문제인데, 뒤

---

\* 이 인터뷰는 한국연구재단의 지원(KRF-2008-361-A00003)을 받았다. 인터뷰의 녹취를 담당한 권기하(연세대 국학연구원 HK연구보조원)와 동영상 촬영을 담당한 정의정(국학연구원 HK연구보조원)에게 감사드린다.

\*\* 김동춘 교수는 현재 성공회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다.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공적 지식인 중의 한 명으로서, 한국전쟁전후민간인학살진상규명위원회 사무처장, 과거청산범국민위원회 상임집행위원장, 참여사회연구소 소장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였다. 서울대학교 사회학과에서 [한국노동자의 사회적 고립]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후 노동운동, 국가폭력, 사회운동 등 정치사회학 관련 여러 분야에 걸쳐 주목할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전쟁과 사회』(2000), 『근대의 그늘』(2000), 『1997년 이후 한국사회의 성찰』(2006) 등 다수의 저서와 논문이 있다. 『전쟁과 사회』는 동아시아의 출판인 선정 동아시아의 책 100권에 선정되었고, 일본어, 독일어, 영어로 번역 출판되었다.

\*\*\* 연세대 국학연구원 HK연구교수, 사회학.

에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저는 이게 MB정부에서만 생긴 일이 아니고 근대 100년 동안 한국사회의 지속적인 특징이었다고 봅니다. 특히 국가와 공공성이 일치하지 않는 점, 밑으로부터의 공공성이 만들어지지 않고, 위로부터 국가에 의해 강요된 공공성, 실질적으로는 시민사회가 공공성의 담지자가 되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물론 이것이 꼭 한국만의 특징은 아니고 일반적인 것일 수도 있겠지만 ..... 시민사회의 의미도 바로 그런 의미에서 사회적인 다수자, 혹은 사회약자의 의미, 동시에 다수의 사람들에게 공통된 것, 다수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 뭐 이런 의미로 해석하고 싶네요.

## 국가와 공공성 간의 괴리와 국가폭력

**박영도** 공공성은 사회적 약자, 다수의 사람에게 공통된 것이자 필요한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 국가, 시민사회, 그리고 사적 이해가 중요한 요인이라는 말씀이 아닌가 합니다. 공공성이라는 것이 이를테면 사회구성원에게 추위를 막아주는 옷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말할 수 있을텐데, 이와 관련하여 일차적으로 중요한 것은 역시 국가라는 제도적 장치가 아닌가 합니다. 이 측면에서 우리 사회의 공공성의 가장 중요한 구조적 특징들이 우리의 역사적 맥락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듣고 싶습니다.

**김동춘**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공성 이야기를 하면 대체로 국가에 관한 사무, 국가에 관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특히 근대 국민국가에서는 그렇죠? 근대 국민국가와 공공적인 것을 거의 동일시하는 것이 사실인데 ..... 저는 공공적인 것이 상대적인 것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가족애를 단위로 본다면 지역사회가 공공영역이 되는데, 다시 국가와의

관계를 본다면 지역사회가 사적인 것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국가나 민족도 가족이나 지역사회, 직업집단 혹은 노조 같은 것에 비추어보면 공공영역이 맞지만, 지구사회에서 본다면 일종의 사적인 이기적 영역이잖아요? 전쟁이 발생했을 때 국제사회에서 국가나 민족을 내세우는 것은, 국가 내에서 가족이나 지역사회를 내세우는 것처럼 이기적인 것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공공적인 것은 상대적인 것이고, 궁극적으로 공공성의 가치는 국가를 넘어선 보편적인 것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적어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범위에서 본다면 국가와 공공영역이 일치하는 것이 맞지요. 그럼에도 저는 식민지 국가라는 것은 한편으로는 근대국가의 외양을 갖추고 있지만, 정복국가이기 때문에 주권국가가 아니고, 또 국민의 대표성이나 참여가 없기 때문에 식민지 국가는 공공영역과 일치될 수 없다고 봅니다. 이렇게 본다면 일본 식민지 하에서의 천황제 국가는 공공영역이 아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일본 식민지 체제도 공공성을 굉장히 강조했다라는 점입니다. 이들은 식민지 초기부터 입만 열면 공공성을 이야기하고, 조선 사람들에게 공공성에 충실해야 한다고 이야기했지요. 그런 점에서 일제가 강요했던 현실 태로서 천황제 국가의 공공성과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투쟁 속에서 그렸던 국민국가, 즉 미래 국가의 공공성은 서로 충돌하는 것이었지요. 그리고 해방 후 지금까지도 분단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분단국가를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 상태로 보지 않는 사람들은 현실 국가로서의 한국의 국가를 공공영역으로 보지 않는 거죠.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하고 싶지는 않지만, 분명 분단국가에는 임현진 교수나 이런 분들이 이야기했던 결혼국가의 특징이 있어요. 저는 그것을 반(半)국가, 미완성국가라고 보는데, 이것은 우선 충분히 주권이 확보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말하지요. 그리고 이 말은 국가가 국민의 보호자 역할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을 뜻하고요. 미군관련 피해 사건들에서 아주 전형적으로 드러났듯이,

국가가 국민의 보호자 역할을 할 수 없다는 딜레마는 분단국가에서 나타나는 대외적 주권의 결여를 표현하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대내적 주권의 차원에서 보면, 절반의 인민주권이라는 말이 있듯이, 국가의 관료제도나 의회제도가 국민 대표성이라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결함이 있어요. 그리고 이 결함은 분단국가와 밀접히 연결되어 있지요. 대외적 주권의 제약은 대내적 주권의 제약과 동전의 양면을 이루니까요. 이 점에서도 현재 한국의 국민국가는 우리가 생각하는 공공영역과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고 일정한 괴리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민주화 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투쟁 속에서 그렸던 국가와 현실태로서의 분단국가 사이에 계속 충돌이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지요. 물론 민주화 운동이 식민지 시대 독립운동과는 좀 다르고, 현실의 국가를 완전히 부정한 것은 아니지만 말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지금까지도 우리 사회에서 공공영역의 수립은 여전히 투쟁의 문제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한편에 우리의 선택 범위 밖에서 주어진 분단국가로서의 공적 영역이 있고, 다른 한편에는 투쟁하는 사람들, 즉 1948년 단독선거를 반대했던 사람들이, 물론 여기엔 좌파도 포함되어 있고 일부 민족주의 세력도 포함되어 있었지만, '이건 아니야' 하고 지향했던 국가와 헌법, 그들이 지향했던 인민 대표 체제라고 하는 의미에서의 공공영역이 있었는데, 이 양자 간의 괴리, 즉 자발적으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공공성으로서의 국가와 현실 국가와의 괴리가 지금까지 계속되는 게 아닌가 합니다.

**박영도** 크게 봤을 때 국가와 공공성 간의 구조적 괴리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 우리 근대사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라는 말씀에 동의합니다. 이 구조적 괴리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겠지만, 선생님께선 여러 저작을 통해서 특히 국가폭력을 강조하셨습니다. 원래 정치를 전쟁에 비유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선생님은 한국의 정치가 전쟁의 정치라는

성격을 강하게 보여준다고 하였고, 또 우리의 근대화도 국가가 주도한 돌진적 근대화로 불립니다. 국가폭력은 근대의 한 현상이기도 합니다만, 그래도 우리의 역사에서 국가폭력이 유달리 강했다고 할 수 있을텐데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김동춘** 저는 공공성은 강요될 수 없는 것이고, 공공성의 철학 자체는 자발성을 기초로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국의 국민국가는 성립과정에서 자발성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말하자면 밑으로부터의 공공성을 억압하면서 나온 측면이 있다고 봐요. 1945년 8.15 직후에 만들어졌던 건국준비위원회 같은 조직이, 물론 이후의 인민위원회는 좌파들이 좀 급조한 측면이 있지만, 밑으로부터의 자발적 공공성의 대표적 사례였다고 봅니다. 지역사회에서 유지들이, 즉 신망 있는 명망가들이 지역 자치를 담당하면서 친일파들을 거기에서 배제하는 통치 모델을 만들려고 했던 것인데, 그게 바로 밑으로부터의 공공성의 맹아였다고 봅니다. 이 맹아를 미군정이 들어와서 파괴했지요. 이 과정에서 공적 가치를 지향했던 사람들, 저는 소극적이든 적극적이든 일체에 저항했던 사람들이 바로 공공성을 추구했던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사람들을 배제하는 방식으로 국가건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자발성에 기초한 설득이 가능하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설득이 가능하지 않는 상태에서 폭력이 동원될 수밖에 없었고요. 폭력은 대구 10.1 사건에서 나온 것이 최초의 폭력인데, 그 배경에 미군정이 미곡 수집인과 관련된 것이 깔려있기는 했지만, 주된 것은 누가 해방 후 국가를 담당하는 세력이 되어야 하는가를 둘러싼 투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결국 폭력으로 진압을 하게 되고, 48년 단독정부 수립을 위한 투표 과정에서 폭력을 동원하지 않고서는 선거가 치러지지 않았던 것, 이것이 우리 사회에서 밑으로부터의 공공성이 좌절되는 과정

이었죠. 그 점에서 저는 한국에서 반공주의라고 하는 것이 다름아니라 지구적 차원에서의 전쟁체제, 즉 미국과 소련의 군사대결 체제가 한국사회에 내재화된 것이라고 보는데, 이 미소 군사대결체제로서의 반공주의는 구식민지였던 한국에게는 식민주의의 연장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식민주의의 연장으로서의 반공주의는 기본적으로 자유민주주의 가치와 양립할 수 없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반공주의 체제가 입법화되는 과정이, 즉 국가보안법이 헌법 제정 직후인 1948년 12월에 제정되었다는 사실이 굉장히 의미심장하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대한민국의 역사를 헌법을 중심으로 보지 않고 국가보안법 체제라고 보기도 하지요. 이 맥락에서 박찬표 선생이나 박명림 선생은 48년 체제를 강조하는데, 이 체제에서 헌법이라고 하는 것은 한낱 규범 원칙에 불과했지요. 헌법이 굉장히 이상적이고 조소앙의 삼균주의 같은 경우도 받아들인 것이라서, 말 그대로 민주공화제의 내용을 잘 갖추고 있어요. 하지만 언제나 헌법은 역대정권에 의해 위반되었고, 그러다보니까 국가보안법이 헌법 위에 있었지요. 국가보안법이 제정되었을 때 표현이 국체(國體), 고쿠타이라는 표현인데, 이 표현은 천황이 강조했던 일종의 국가 신비주의라고 할까, 국가의 종교화라고 할까, 근대 속의 전근대라고 할까, 하여튼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고쿠타이라는 개념이, 근대의 합리성 원칙과는 전혀 맞지 않는 이 개념이 국가보안법의 전문에 부활되었다는 사실 자체는 다름아니라 근대적 공공성이 좌절되고 다시 위로부터의 파시즘적인 국가주의가 강요되었다는 것을 뜻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한국의 근대라고 하는 것이 식민지적 근대와 동시에 반공주의 근대인데, 초기에 식민지적 근대에서 외국 세력에 의해 강요된 국가와 질서, 그 다음에 48년 이후에는 국민국가가 수립되는 과정에서 지구적 반공주의가 식민주의를 연장시키면서 식민지 엘리트를 그대로 해방 이후에 국가 엘리트로 다시 등장시킨 것, 식민지 하에서 그야말로 공공성을 지향

했던 사람들을 모두 제거하고 오히려 사적 이익만 추구했던 사람들을 다시 건국의 주역으로, 대한민국의 주역으로 만든 것, 이것이 국가수립 과정에서 폭력이 동원되는 것하고 동전의 양면을 이루는 것이 아닌가 해요.

어쨌든 폭력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공공성을 질식시키고 사람들을 사적 영역으로 움츠려들게 만드는 것이죠. 폭력은 자발성을 억누르고 관계를 파괴하고 사람들을 권력에 복종하게 하고 맹목적 충성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발적 공공성이 설 자리가 없어지게 되고, 또 반공 자체가 증오의 논리라서 긍정적 가치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공적 영역에서 자발적 참여를 배제하는 속성을 애초부터 가지고 있었어요. 이 폭력과 반공주의를 기반으로 50년대 이승만 체제 하에서 온 국민들을 다시 일제 식으로 말단 동네까지 국민반이라는 조직을 만들어 지역사회의 공적 영역을 좌절시켰고, 또 박정희 유신체제 하에서도 지역사회나 전국 모든 영역들을 국가관료의 통제 하에 두는 식으로 자발적 공공성을 좌절시키는 과정이 있었지요. 그래서 동원적 근대화를 통해 결국은 국가가 국민들의 이기심이라고 할까, 출세욕, 상승욕구나 이런 사적 욕구를 최대한 부추기면서 동원해가는, 그래서 국가가 가족 사이에 시민사회를 배제하고 가족과 국가가 직접 연결되면서 가족 이기주의를 최대한 부추기면서 동원해가는 이런 체제가 바로 개발독재였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영도** 국가폭력이 어떤 식으로 식민주의, 반공주의 그리고 개발독재와 결합되었고, 또 어떻게 서로가 서로를 강화시켜 왔는가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국가폭력의 유제가 87년 이후에도 다양한 형태로 남아 있지 않는가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동춘** 폭력기구는 87년 이후에는 많이 완화가 되었죠. 사실상 60~



70년대는 중앙정보부가 정치를 했다고 할 수가 있고, 80년대에는 안기부가 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87년 이후에는 국민 대표성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었죠. 대통령을 우리가 선출할 수 있게 되었고, 정치의 중심이 중앙정보부, 안기부 대신 의회로 옮겨오게 되었고, 그 다음에 사법기구의 역할이 커졌지요. 그래서 최근에는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라고 표현할 정도로 사법이 지나칠 정도로 정치의 중심에 등장하는 시점까지 왔지요. 저는 규율사회에서 최근 한병철 선생이 말하는 “피로사회”나, 제가 주장하는 “기업사회”로의 이행이 일어나지 않았나 합니다. 여기서 신자유주의의 시장논리와 맞물려서 사람들이 자본주의 논리에 의해 훨씬 더 사사화되지요. 과거에는 폭력에 의해 사사화가 강요되었다면, 지금은 시장의 논리에 의해 사사화가 강요되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서 이와 동시에 과거의 폭력의 유산들이 적어도 50대 이상의 사람들에게는 권력에 대한 기본적인 공포감으로 남아있고, 수직적인 명령복종을 요구하는 관료체제가 여전히 있고, 10년의 민주정부의 경험에도 불구하고 MB정부에서 민간인 사찰이라든지 언론통제, 검찰과 사법부의 편향 등 여러 불법적인 모습이 노골적으로 나타나고 있지요. 이런 양상은 50대 이상의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과거 군사정권 시절의 폭력의 체험과 군사정권의 경험을 가진 관료들이 적응해 가는 양태들이 아닌가 합니다.

**박영도** 제도적 차원에서 눈에 보이는 형태의 폭력은 줄어들었습니다만, 그 이면에서 마음에 작동하는 폭력, 비합리적으로 작동하는 폭력이 여전히 있을 텐데요. 이를테면 아직까지 그 유산이 강하게 남아 있는 일종의 마음의 폭력체제로서의 반공주의 같은 것이 대표적인 사례가 아닌가 합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 이 반공주의의 폭력 같은 것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김동춘** 반공주의는 지금은 많이 약화되기는 했지만, 보수세력이 위기에 몰리면 또다시 중북좌파를 들먹거리는 데서도 볼 수 있듯이, 한국에서 여전히 반공주의의 낙인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지배논리이지요. 빨갱이 낙인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다른 글에서도 표현했지만, 일종의 사형선고와 비슷한, 금치산자 취급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말이 곧바로 폭력이 되고, 특히 조선일보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만, 언론이 검찰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저놈 빨갱이야 하고 몰아붙이면, 그것이 기정사실화 되어 곧바로 그 사람의 사회적 존재로서의 역할이 제한되어, 우선 취업이 안 되고, 승진이 안 되고, 사회적으로 매장되고, 피선거권과 선거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실질적으로 사회적으로 배제가 되는 식으로 말의 폭력효과가 나타나죠. 민주화 이십 몇 년이 지났는데도 틈만 나면 중북좌파라는 말을 사용하는 이유도 그것이 갖는 이런 효과를 알기 때문이죠. 과거에는 고문 같은 물리적 폭력을 통해 사람을 위축시켰지만, 지금은 말의 폭력을 통해 사람을 금치산자와 같은 사람으로 만들고, 사회적 시민권을 박탈할 수 있다는 것을 아니까 말의 폭력을 계속 사용하고 있지요.

그러나 그것이 갖는 사회적 약발은 옛날에 비해 지금 젊은 세대들에게는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 사실이지요. 그러다보니까, 한국이 여전히 분단체제라서 그런 수법이 계속 남아있기는 하지만,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그런 식의 말의 폭력이 사법영역으로 많이 넘어간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도 기율권력으로서 검찰의 역할이 매우 크지만, 과거에 비해 지금은 공안기구의 역할이 현저히 후퇴했고, 제도적 기구로서 검찰이 등장했고 언론의 역할이 훨씬 커졌고, 소송이나 사법적 쟁송을 통해 사람을 위축시키는 방식이 과거에 비해 훨씬 많이 활용되고 있어요.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두드러진 현상의 하나는 이를테면 명예훼손죄로 기소한다거나 또는 촛불시위에 참여한 학생들, 반값 등록금 시위에 참여

한 학생들에게 수백만원의 벌금을 때리는 식으로 형사처벌에서 민사처벌로 무게중심이 이동하고 있다는 점이지요. 전통적인 반공규율에서부터 자본규율의 방식으로 이행하는 과도기에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사회에서 시민사회나 공적 영역의 취약성 때문에 이런 자본규율 방식이 훨씬 더 여과 없이 관철되는 면이 있어요.

**박영도** 명시적인 국가폭력 이면에서 시민의 마음에 행사되는 폭력도 이제는 국가폭력보다는 자본 메커니즘에 부속되는 양상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김동춘** 예, 주종이 좀 바뀐 것이 아닐까. 예전에는 저쪽이 주고 이게 좋이었다면, 지금은 자본의 힘이 주가 되고 전통적 규율은 부차적이 되는 이런 방식으로 바뀌는 것 같습니다.

## 공공성과 민족 문제

**박영도** 근대의 국가적 공공성에서 항상 짝패처럼 같이 등장하는 것이 민족 문제입니다. 서구의 경우 민족이 국가라는 명시적 텍스트를 보충하는 보이지 않는 외설적 기구로서 작동한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우리의 경우에는 오히려 심리적 폭력기제로서의 반공주의가 그러한 외설적 역할을 담당했고, 어떤 점에서 민족은 이면에서조차 억압되지 않았나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우리 역사에서 공공성과 관련해 '민족'이 겪은 특징적 경험 혹은 현상이 있지 않습니까?

**김동춘** 아까도 잠깐 이야기를 했지만, 민족과 국가는 가족과의 관계,

지역사회와의 관계에서 보면 공공성의 영역이이지만, 그것을 넘어서는 가치, 즉 세계 혹은 인류 공동체의 관점에서 보면 이기적인 단위가 되지요. 저는 1945년 일제로부터의 해방까지, 그리고 조금 더 연장을 하면 87년 정도까지는 민족이 우리 사회에서 공공성의 한 상징적 단위로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시점에서 본다면, 민족은 절반만의 공공성이고, 이제 공공성을 대변한다기보다는 사적 영역으로 후퇴하는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저항 민족주의는 공공성의 내용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해요. 저항 민족주의는 국민국가를 건설하려고 하는, 가족의 이해와 지역의 이해와 직업적 이해와 계급적 이해를 넘어서서 민족 전체의 공동선을 지향하는 공공적 가치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도 어떤 민족주의냐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요. 예를 들면 매천 황현이나 최익현 같은 근왕적 민족주의에서부터 신채호 선생처럼 애국계몽운동에서 무정부주의적 지향의 민족주의, 그 다음에 사회주의자들의 민족주의가 표방했던 것이 내용면에선 다 약간씩 다르지요. 그러나 45년 이전에는 확실히 민족은 공공성을 담지하는 내용을 갖고 있었다고 봅니다.

제가 왜 87년까지를 말하느냐 하면, 87년까지는 민족주의나 민족운동이 통일을 지향했다는 점에서 공공성을 담지할 수 있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87년까지는 민족을 이야기하면 반공주의를 위협하는 일종의 반체제 이데올로기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통일 지향, 통일국가 건설을 염두에 둔 ‘민족’은 지배세력과 충돌하는 측면이 있었어요. 장준하 선생이 박정희에 대해서 “대한민국 사람 누구나 대통령이 될 수 있지만, 단 박정희만은 절대로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던 이유는 박정희가 5.16 쿠데타를 일으키기 전까지는 평생을 자기 사적 이해를 위해서만 살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이에 비하면 장준하는 학병에 갔다가 도망쳐 나와 광복군에 들어갔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거기서 두 사람의 지향이 확실히 대비되지요 ……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 87년까지는 민주화와 민족이 어느 정도는 같이 갔고, 항상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면 그 다음에 민족 통일이 나왔어요. 4.19 때도 이승만이 쫓겨난 다음에 곧바로 통일운동이 나왔고, 87년에도 전두환 정권이 끝난 다음에 곧바로 통일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87년 정도까지는 민족이 우리 사회가 충분히 담지하지 못한, 우리 국민국가가 담지하지 못한 더 높은 가치로서의 공공성을 지향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때의 공적 가치는 통일국가였죠. 통일국가의 국민됨, 주권국가로서의 통일국가가 일종의 이상이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87년 이후에는 현저히 성격이 달라졌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우선 남한 자본주의와 북한 체제와의 관계에서 남한 자본주의가 확실히 우위에 서게 되었고, 결국은 통일의 주도권이 자본 주도의 통일로 기본적으로 이행하게 되었고, 통일 자체가 이미 더 이상 남한의 국가를 위협하는 이데올로기의 성격을 떠난 측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이 자본 수출국이 되어 동남아 노동자들을 지배하는 모습을 띠게 되었고, 한국에 외국인 노동자가 들어와 우리가 그 사람들을 인종적으로 차별하는 사회가 되었기 때문이지요. 이런 상황에서 민족은 통상 과거에 파시즘 체제가 내세웠던 민족처럼 우익 이데올로기로 변질되기 시작했고, 그런 점에서 민족주의 내용이 바뀌어 이제 다문화 사회에서 민족을 이야기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공공성을 표현하지 못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지금의 상황에서 민족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주 실낱같은 정도의 공적 의미가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대체로는 한국의 자본이나 사적 이익을 옹호하는 것이 되어버렸죠. 다시 말해서, 한국 자본이 인도네시아에 가서 인도네시아 노동자 착취하는 것을 민족의 이름으로 정당화한다든지, 삼성이 글로벌 자본주의에서 잘 나가는데 삼성의 이익이 국가의 이익이라고, 민족의 이익이라고 생각한다든가 하는 의미로

민족이라는 말의 함의가 바뀌지 않았나 합니다. 사실 민족이라는 것이 원래 그릇이고, 거기엔 어떤 것이든 담을 수 있는 것이지요. 민족의 의미가 이렇게 바뀌지 않았나 합니다.

**박영도** 다문화 사회의 맥락에서 국가나 민족의 위상은 선생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상당히 많이 바뀌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이 여전히 중요하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 복지문제의 경우, 국가가 많은 한계에 직면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요구와 기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의 상황에서 국가의 적극적 역할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김동춘** 저는 국가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네그리 식의 제국론에는 동의하지 않아요. 물론 규율 체제로서의 국가가, 그리고 글로벌 자본이 현재 국민국가를 압도하는 것은 사실이지요. 최근 신한은행과 국민은행이 CD금리 사기치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지 않습니까? 온 나라 사람들이 은행의 채무노예 비슷하게 된 상황에서 은행에 대해 우리가 분노하고 있지만, 이 은행의 소유자는 사실은 외국 자본이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라타니 고진처럼 국민국가의 역할은 끝났기에 지구적 시민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좀 성급한 생각이라고 봅니다.

그 이유는 글로벌 국가체제의 위계가 여전히 공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패권국가와 패권국가가 아닌 나라들 간의 힘의 관계가 여전히 존재하고, 따라서 이 힘의 관계와 자본의 관계라는 것이 중첩되어 있는 상황이지요. 그런데 이 중첩된 상황을 자본 중심으로만 보게 되면서 국가의 역할을 포기하는 경향이 있는데, 하지만 아직은 글로벌 시민사회가 글로벌 자본하고 글로벌 패권국가에 맞설 수 있는 단위가 아니지요. 결국은 국민국가가 역할을 할 수밖에 없고, 국가를 진정한 의미의 공공

성을 담지한 국가로 바꾸기 위한 노력이 여전히 중심적인 것이 아닐까 해요. 그러니까 국제 사회에서 패권국가들, EU나 혹은 미국과 같은 과거의 구제국주의 국가들이 지구적인 환경의제와 같은 문제에 대해 책임 지지 않는 것에 대해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해야 할 필요성이, 물론 힘은 약하지만, UN 같은 기구에게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자본에 대한 규제도 마찬가지예요. 스티글리츠가 IMF 위기 직후 한국의 관료들이 IMF 요구에 대해서 그냥 무릎 꿇는 것을 보고 너무 한심하다고 한 적이 있어요. 국제자본의 농간을 막을 방어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구는 국민의 대표자이자 공공성의 담지자인 국민국가 밖에 없는 것 아닐까요? 비록 현재 국민국가가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지만, 그런 역할을 하도록 계속 압박을 가해야 하는 역할이 여전히 시민사회에 남아있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특히 제가 공공성을 사회적 약자나 다수자와 관련된 것으로 보는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사실 그 이유는 공기업 민영화 조치에 반대하여, 정확하게 말하면 민영화가 아니라 사사화이지만, 공적 부분을 유지해야 할 이유와 다르지 않지요.

예를 들면 가장 기초적인 식량과 물 자원에 관한 것, 그 다음에 안보와 안전에 관한 것, 환경에 관한 것이지요. 자본은 이동할 수 있지만 노동은 이동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이동할 수 없는 것이 공공이라고 보고 있어요. 쉽게 이동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지요. 여기에는 돈이 없어서 이동을 못하는 사람도 있지만, 문화적으로 거기에 터를 잡고 있기 때문에 외국어를 잘 할 수 없는 사람들도 포함돼요. 언제나 글로벌 세력들이나 지배계급은 항상 외국어를 잘 하는 사람들, 일제 때는 일본어 잘 하는 사람들, 지금은 영어 잘 하는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국가가 없어져도 별로 아쉬울 것이 없는 사람들이지요. 이에 비해 외국어를 쉽게 구사할 수 없는 보통 사람들, 그리고 문화적으로 가족관계나 사회관계에 의해 자기가 살던 터전을 쉽게 떠날 수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게 관한 것이 공적인 것이지요. 그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식량, 물, 그리고 기본적인 일자리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보호해주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박영도** 세계화 속에서 국가의 위상과 함께 다문화 사회에서 민족주의도 복잡하고 어려운 주제입니다. 선생님께선 ‘열린 민족주의’를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민주적 개방성과 민족주의적 응집력 사이의 선순환 관계, 민족주의가 민주주의의 창백함에 생기를 불어넣고 민주주의 원리가 민족주의의 맹목적 요소를 순치하는 선순환 관계가 ‘열린 민족주의’라는 말 속에 담겨 있지 않나 합니다. 그런데 좀 전에 말씀하실 때엔 좀 부정적으로 말씀하신 듯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김동찬** 사실 이론적으로는 다 나온 이야기죠. 양날의 칼 아납니까? 또 누가 표현했더라, 독 물은 칼, 한 번 잘못 쓰면 큰일 나는 굉장히 위험한…… 이미 이론적으로는 정리가 되었다고 생각하고요. 거기에 우리가 더 보탬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 우리나라의 특성을 좀 감안한다면 어쨌든 그동안 피압박 민족의 전통이 있었고, 그 다음에 저항 민족주의의 전통이 있었고, 동질성이 강하죠. 이런 것이 하나의 자원으로서는 존재하는 것 같은데, 이 자원을 우리가 버릴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게 어떻게 결합할 수 있는지는 저도 자신이 없어요. 하지만 시민이라는 창백한 자유주의적 개념으로는 담기 어려운, 어네스트 겔너(E. Gellner)가 이야기하는 응집체, 이것을 저는 사회적 응집체로서의 민족으로 재정의 해보면 어떨까 해요. 혈연적 요소를 가능하면 빼버리고, 민족 개념을 사회적 연대체로 재정의하게 되면, 다문화 정책도 일제가 했던 식의 동화주의적 성격이 강한 다문화 정책을 피할 수 있을 것 이라고 봐요. 그것이 하버마스가 말하는 헌법 애국주의까지 갈 수 있을



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지향하는 민족이나 국가의 가치를 중심으로 응집체를 만들고, 그렇게 민족의 에너지를 민주주의와 결합시킨다면, 이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민족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으면서 갈 수 있는 길이 있지 않을까 하는 거죠.

특히 우리는 아직까지 미국과의 관계에서 충분한 주권을 누리지 못하는 측면이 있고, 최근 일본과의 한일 군사정보협정 추진과정에서 드러났듯이, 한국의 외교부나 국방부는 여전히 식민지 관료의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기들은 그게 국익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보기엔 그 사람들의 이익, 강자들의 이익이겠지요. 이런 점에서 일종의 사회적 응집체로서의 민족이 보편성을 지향해 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함석헌 선생의 표현으로 말하면 ‘우리는 외세로부터 온갖 굴욕을 다 당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저도 바로 이 점 때문에 일본이 못 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중국이 못 보는 것을 볼 수 있고, 미국이 못 보는 것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위에서는 안 보이지만, 피억압자가 밑에서 보면 위가 다 보이는 면이 있지요. 박현채 선생 식으로 표현하면 민족적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것, 또는 민족주의가 약자들의 이데올로기로서 기능할 수 있는 그런 측면들, 그런 것을 우리가 완전히 내팽개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저류에서 진행되는 이러한 점들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남아있다고 생각해요.

**박영도** 사회적 연대의 자원으로서의 민족주의, 그러니까 헌법상의 권리를 말할 때 기본적 자유권이나 정치적 권리 외에 사회적 권리도 말하는데, 이 사회적 권리가 뿌리내리기 위해 필요한 연대의 자원으로서 민족주의의 역할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해도 될까요?

**김동춘** 그렇죠, 예를 들면 평택 대추리에서 미군기지 이전할 때 보여

줬던 연대는 전통적인 민족주의나 반미주의만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거기서 살아온 사람들의 주거권 문제, 생존권 문제와 결합되어 있는 것이지요. 전통적 의미의 반미 민족주의가 아니라, 우리가 살 터전을 우리가 양보할 수 없다는 주민들의 의식과 그것에 바탕을 둔 연대의식, 이런 것이 그런 에너지의 하나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박영도** 일종의 사회적 공공성의 자원이라고 봐도 되겠죠.

**김동춘** 그렇게 봅니다. 그건 대부분 저항 속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 신자유주의, 기업사회, 공공성의 파괴

**박영도** 공공성이라는 것을 사회구성원에게 사회적 무시와 모멸 같은 사회적 추위를 막아주고 최소한의 인간적 존엄을 지켜주는 사회의 옷으로 이해할 수 있다면, 오늘날 공공성이라는 옷은 단순히 남루한 정도를 넘어서서 온갖 곳이 다 찢어지고 헤어져서 대부분의 사회구성원들이 거의 맨살로 한겨울의 북풍한설을 맞이해야 하는 상태가 아닌가 합니다. 신자유주의가 만들어낸 우리 사회의 이러한 모습을 선생님께서는 “기업사회”라는 개념으로 정리하고 문제점을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기업사회란 무엇이고, 기업사회 속 공공성은 어떤 모습인가요?

**김동춘** 예, 대치 수상의 유명한 말, “사회, 그런 것은 없다”는 말에 모든 것이 집약되어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사회를 공공적인 것으로 바뀌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존재하는 것은 오로지 시장이라는 생각이 전면화되면서 사회주의 붕괴 이후 신자유주의가 국가사회주의의 자

리를 대신하며 일종의 유사종교가 된 거죠. 사회주의가,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국가사회주의가 무너지면서 사회주의적 유토피아의 자리를 자본주의 유토피아가 대신하고, 이와함께 사회라는 것은 없고 시장이 모든 것을 해결해줄 수 있다는 거짓 약속이 판을 치는 시대가 1989년 탈냉전 이후의 지구사회의 모습이죠.

이때 복지국가가 약간 후퇴하면서 신자유주의로 가는 게 유럽형이라고 한다면, 원래 자유주의적 전통이 있는데서 신자유주의로 간 것이 영미형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남미형하고 한국은 개발독재 체제 하에서 신자유주의로 간 경우이지요. 그런데 개발독재 하에서는 사회적 인프라라고 할까, 복지라고 할까, 하여튼 공공지출이 워낙 미미했기 때문에, 이 경우에 시장주의가 훨씬 폭력적 방식으로 온 것이 아닌가 합니다. 다시 말해서 시장주의를 제어할 수 있는 것이 국가,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자본의 무차별적인 이윤추구에 대한 국가의 규제인데, 이 규제 자체가 워낙 약했을 뿐만 아니라 공적 예산 지출 자체가 워낙 취약했던 상태에서 신자유주의 체제로 이행했기 때문에, 이 경우에 시장주의는 영미형보다 더 폭력적으로 강요된 측면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기업사회를 공공성의 관점에서 본다면 병영사회와 대비시켜 보고 싶어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든 자본주의 사회는 기업사회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국가안보가 지상과제가 되어 국민을 위로부터 동원하고 또 시민사회의 영역을 극도로 축소시킨 것이 병영사회였다면, 기업사회는 병영사회의 반대편에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기업사회는 시민사회가 극도로 축소되어 있고 국가 자체를 완전히 기업과 같이 운영하려는 논리, 국가의 대통령이 CEO의 역할을 하게 되어 있는 사회를 말하지요. 기업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독재 조직이 아닙니까? 특히 한국처럼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는 나라에서 기업은 오너 독재체제인데, 이 오너 독재의 방식으로 모든 사회 구성원을 성장과 자본주의적 효

울성을 위해 동원하는 거죠. 이 동원은 과거의 병영사회와는 달리 위로 부터 강요하는 것이라기보다도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경쟁을 해서 승자는 위로 올라가고 패배자는 도태시키는 방식인데, 이런 시스템이 바로 기업사회적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생각하는 기업사회는 경제성장과 기업의 이윤추구 논리가 과도할 정도로 사회 모든 영역, 모든 조직에 곧바로 관철되어 공적 역할을 해야 할 국가의 관료, 사법, 언론, 대학 등이 공적 역할을 포기한 상황을 말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이것을 웅변하듯이 보여준 것이 1993~94년부터 시작된 삼성 따라 배우기죠. 공무원들이 삼성연수원에서 연수 받기 시작하고, 삼성을 모델로 해서 국가관료 조직을 재구축하려고 했지요. 거기서부터 시작된 일련의 과정들, 그것이 우리 사회가 기업사회로 이행하는 출발점 이었고, 또 그것이 현재의 모습이 아닌가 합니다. 그리고 모든 국민이 소비자화 되고 소비자가 왕인 시대라는 것도 그래요. 소비자가 왕이 되면 노동자는 설 자리가 없어지고, 노조는 오히려 방해물이 되지요. 소비자가 왕이 되면 소비할 능력이 없는 사람은 요즘 유행하는 말로 하자면 사회에서 잉여가 되지요. 기업은 오로지 돈 많은 소비자에게만 반응하잖아요? 또 병영사회와 마찬가지로 공적 영역이 극도로 축소된다는 점에서는, 한국의 기업사회는 병영사회의 연장인 측면도 있다고 봐요.

**박영도** 국가 관료체제조차 기업의 외주업체 같은 것으로 전략하는 사회…….

**김동춘** 말 그대로 공공기관의 업무방향이 비즈니스 프렌들리죠. 가장 웃기는 것은 감사원조차도 비즈니스 프렌들리 한다는 겁니다. 지하철타보면 “기업하기 좋은 감사원”이라는 구호를 볼 수 있잖아요? 감사원이나 금융감독원은 공적 역할의 보루인데 말입니다. (웃음) 더 코미디 같은 일은 MB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이 비즈니스 프렌들리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상 법치를 포기하겠다는 말인데, (웃음) 이 정도면 아주 극단적인 형태인 거죠.

**박영도** 기업사회의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당면 과제들, 그러니까 사회복지 문제, 비정규직 문제 등 다양한 문제가 있을 텐데, 우선 사회복지 문제와 관련하여 가장 심각한 쟁점은 무엇이고 그 해결책은 어떤 방향이어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김동춘** 정책적으로 보면 답은 다 나와 있지요. 증세하고 공공지출 확대해야지요. 증세는 소득세 플러스 법인세인데, 여기서 법인세 문제로 가게 되면 복지 확충은 계급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복지는 단순한 정책적 선택의 문제이기 전에 계급간 타협의 문제이고, 계급타협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복지는 대체로는 국가복지이지요. 그런데 국가복지라면 대체로 서유럽 국가를 연상하게 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그대로 따라가서는 안 될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국가복지는 약자, 빈자에 대한 국가의 관리, 통제라는 측면이 있잖아요? 복지 수급자들을 보호받아야 할 사람, 주권을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으로 보는 복지국가의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서유럽처럼 증세와 공공지출 확대에만 시야를 한정하지 말고 약자들이나 수급자들을 주체화하는 측면까지 포함해야 하는 것이지요. 이 사람들의 자활과 참여, 그리고 복지기관이나 복지 수급과정에서 운영의 주체가 되는 과정이 포함되어야만 복지가 공공성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단순히 복지확대를 위해 공공지출만 확대하고 세금만 늘여서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더 나아가 우리 사회의 전체 시스템의 변화의 문제, 즉 병영사회에서 기업사회로 변화된 이 상황을 어떻게 하면 사회적 약자의 자력화(empowering) 문제와 결합시킬 것이냐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박영도** 그러면 사회적 연대의 강화와…….

**김동춘** 그렇죠, 그것과 결합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이것은 평화문제하고도 연동이 되어 있어요. 안철수도 이 문제를 들고 나왔던데, 한국에서는 평화문제하고 복지문제가 연동되어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선 공적 지출의 상당한 부분이 국방비로 나가고 있잖아요. 국가예산의 10%가 넘죠? 그러면 300조면 30조 이상이 되고 있고, 모르긴 해도 그 중 10조 이상이 무기구입에 지출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개성공단 같은 것이 두세 개는 더 만들어져야 하는데, 남북관계가 경색된 탓에 안 만들어지면서 한국의 중소기업들이 빈사상태에 놓여 있잖아요. 한국의 중소기업이 북한에 투자를 해서 살고, 그러면서 북한의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도 살리는 것이 곧 투자와 연대가 함께 가는 길이지요. 또 평화체제로 가야만 국방비 지출을 비롯한 불필요한 분단 유지비용을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생기고 사회복지에 대한 지출을 늘릴 수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복지문제가 평화문제와 연동되어 있다고 봐요. 물론 평화문제가 해결된다고 복지문제가 자동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 부분을 고려하지 않는 복지론은 공허하다고 봅니다.

또 하나 더 중요한 측면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유럽의 복지국가들은 과거의 1,2차 세계대전 등 전쟁기에 주변에 있었던 나라들이에요. 전쟁에서 변경에 있는 나라에서 복지가 확대되었다는 말은 곧 내부 사회세력 간에 극단적 대립이 존재하는 나라에서는 복지, 즉 사회적 타협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말이 되죠. 지금 우리나라를 보면 조그만 것 가지고도 원수처럼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계급타협이나 사회적 타협이 이루어지려면 대외 평화가 유지되어야 해요. 우리처럼 반복, 반공이 최고의 이데

올로기가 되어 이렇게 대립하는 데에서는 사회적 타협이 어려워요. 바로 이 점 때문이라도 평화문제와 복지문제는 연동이 되어 있는 거지요.

**박영도** 복지문제엔 전통적 계급문제와는 약간 다르지만 그에 못지않게 심각한 문제일 수도 있는 비정규직 문제도 포함이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구조적 실업의 장기화와 심화 현상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 산업혁명 시대처럼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여 새로운 고용을 창출하리라는 보장도 희박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고령화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더 이상 경제적 관점에서선 해결되기 어렵지 않나 합니다. 그런 문제들이 정치적 문제가 아닌 적은 없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정치적 접근이, 이를테면 시민임금이라던가 시민노동 같은 접근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김동춘** 이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깊이 있게 연구한 것은 아니지만, 평소의 생각만 말씀드리면, 비정규직 문제는 우리가 비정규직을 완전히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가장 좋지만, 현실화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우선 해결할 수 있는 길은 기업 단위에서는 선택의 폭이 굉장히 좁고, 결국 복지문제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임금 차이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이 적용되도록 하는 것이 맞고요. 왜냐하면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 사회가 신분사회라는 말이 되니까요. 똑같은 노동을 하면서 한쪽은 4백만원 받고 한쪽은 2백만원 받는다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으로는 용납되기 어려운 현실이지요. 게다가 그것은 비정규직 종사자를 2등 시민으로 전락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연대를 파괴하고 말죠. 그래서 그 원칙이 우선 지켜져야 한다고 봅니다. 비정규직 문제는 주로 중소기업의 열악한 조건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재벌 대

기업이 중소기업을 거의 약탈하는 위치에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지요. 이 약탈적 관계가 수정되지 않는 한에서는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이 어렵다고 봐요. 공공부분에서 비정규직을 철폐하는 것은 중요하지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사기업에서의 문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권력관계를 어느 정도 균등화하는 것만이 해결책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실업문제의 경우도, 세계경제가 장기침체로 들어간다는 말이 있고, 유럽발 위기가 더 확대되어서 향후 5년 동안 계속 어려움이 이어질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고, 중국의 경제도 지금 둔화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연대의 관점에서 우선 할 수 있는 것을 본다면 노동시간 단축 문제가 제일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노동시간 단축하고 일자리를 나누는 거죠. 나는 제한적으로 임금 피크제 같은 경우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해요. 실업은 단순히 경제적 곤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자격이 박탈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실업자들에게 시민적 공공성을 요구할 수 없으니 실업자의 증가라고 하는 것은 결국 민주주의의 파괴로 이어지게 되고, 파시즘으로 가는 길이 되지요. 그래서 민주주의를 파괴시키지 않기 위해선 실업자를 어떤 형태로든지 경제활동에 참여시켜야 해요. 이와 관련하여 우리 사회에서 어떤 합의가 만들어져야 할 것 같아요. 일자리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적 곤궁의 해소라기보다는 인간으로서의 자존감을 보장하는 것이라는 합의 같은 것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 문제는 높은 대학 진학률과 고졸, 대졸 임금격차 문제하고 연동이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고학력 실업문제하고 연계되어 있으니까요. 그리고 실제로 대부분의 경제가 서비스화 되어 가는 마당에, 지금 신규고용의 70%가 서비스업이에요. 고학력이 필요 없는 상태라서 고졸자만으로도 충분한 상황이죠. 지금 MB정부에서 잘하고 있는 일 중에 하나가 대기업에게 고졸자를 의무로 채용하게 하는 거죠. 물론 그것



도 굉장히 힘이 약하지만, 대기업들·재벌 기업들에게 실업계 학생들의 의무채용 같은 것을 정치적으로 확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대학 진학 유인을 줄일 수 있고, 유인을 줄이게 되면 사회적 낭비를 줄이게 되고, 당연히 모든 문제가 이것과 연동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박영도** 일자리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적 곤궁의 해소보다는 인간으로서의 자존감을 보장하는 것이라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말씀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리고 비정규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신분사회로 갈 수 있다고 하셨는데, 요즘 신분사회로의 경향이 곳곳에서 많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김동춘** 실제로 그래요. 준신분사회적인 측면이 있어요.

**박영도** 서비스 노동을 말씀하셨지만, 서비스 노동이 감정노동으로 발전하게 되면, 이것은 전형적인 신분사회의 형상이 아닌가 합니다. 구조적 실업의 심화, 비정규직 심화, 고령화는 계약관계의 축소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근대로의 이행을 보통 “신분에서 계약으로”라고 요약하는데, 오늘날의 경향은 오히려 “계약에서 신분으로”가 아닌가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공성은 단순히 계약관계에 기초한 사회의 공공성과는 다른 모습, 다른 구조를 가져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문제들이 일차적으로는 국민국가적 틀 안에서 해결해야 할 것들이지만, 단순히 국민국가의 틀 안에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맥락에서, 선생님도 잠시 언급하셨지만, 세계화된 자본의 운동을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됩니다. 이와 관련하

여 많이 거론되는 것이 글로벌 민주주의, 경계를 넘어서는 공공성 같은 규범적 방향의 기획인데요, 하지만 항상 그렇듯이 현실은 어렵고 복잡한 듯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동춘** 어쨌든 국민국가가 세계 시민사회에서 공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압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압박한다는 것은, 구체적인 정책으로 말하자면,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공적개발원조) 지출 같은 것을 늘이고, OECD나 이런 데에서 경제적 자본 문제가 아니라 노동의 문제가 많이 논의되도록 하는 것이고, 그리고 패권국가들이 이런 데에 더 많은 돈을 내어놓도록 압박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것에 국민국가의 역할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더라도 각 나라 안에서 비시민, 혹은 2등시민의 문제는 여전히 남는 것 같아요. 오늘날의 글로벌 자본주의 하에서는 패권국가의 국민이라고 해서 대접받는 시민이고 종속국가의 국민이라고 해서 배제된 사람인 것은 아니고, 어떻게 본다면 이제 한국 내의 비시민과 미국 내의 비시민이 거의 비슷한 처지에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이 과거의 제국주의 시대와 다른 점이에요. 제국주의 시대에는 잉여가 자기 나라 국민들에게 떨어졌기 때문에 그 특혜를 누렸는데 비해, 이제는 지구 자본가들은 이익을 향유하고 있지만, 지구적 프롤레타리아들은 살아가는 처지가 거의 비슷해지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좀 맹아적이지만 국민국가로 해결할 수 없는 글로벌 시민사회의 의제가 이제 떠오르는 것 같아요.

글로벌 시민사회의 의제로서 G20 회의 같은 데에서 압력을 행사하는 것이라든지, 자본가 주도의 다보스 포럼에 맞서서 추진되는 브라질 주도의 세계사회 포럼(World Social Forum)이나 필리핀의 사회학자 월튼 벨로가 주도하는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 등의 역할들이 있지

요. 이런 활동이 아직은 극히 미약하지만 밑으로부터의 시민적 공공성이 국가의 단위를 넘어서서 진행되는 것에 대해 우리도 이제 고민을 하고, 시작을 하고, 힘을 보태야 할 시점에 온 것 같아요. 지난 번 위키리크스에서 비밀문건을 폭로해서 각국 국가 엘리트들이 긴장했는데 그런 식으로 미디어를 통한 역할도 있고, 사회운동을 통한 역할도 있는 것 같고, 지식인들의 네트워크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학교에서는 아시아 연합 커리큘럼을 기획하고 있어요. 강사들도 여러 나라에서 온 분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학생들이나 젊은이들 사이에서 이런 식의 네트워크를 활성화 시키는 것도 시민사회의 노력의 일환이 아닐까 해요.

그리고 이론적으로는 한 국가 내에서만 배타적인 시민권을 부여하는 원칙, 즉 근대 국민주권의 원칙도 재고하고 허물 때가 되지 않았나 해요. 재일동포 문제 같은 것을 생각할 때마다 이 생각이 들어요. 재일동포 차별은 멀리는 식민지 과거청산, 이후 남북한의 분단, 일본의 혈통주의적인 시민권 부여 원칙이 맞물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들이 일본에 귀화하거나 단순히 한국 국적을 가진 채 참정권을 얻음으로써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중 시민권 부여 제도 같은 것으로 좀 나아가야 하는데…….

**박영도** 현실적으로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규범적인 방향에 있어서는…….

**김동춘** 예, 한 번 생각해볼 수 있는 문제 같아요.

## 시민사회와 공공성

**박영도** 예,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시민사회 쪽으로 넘어온 것 같습니다

다. 현대사회를 다양한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겠지만, 크게 보아 돈과 권력과 말이라는 세 가지 사회적 자원들이 서로 어떤 힘의 관계에 있는지를 보는 것도 하나의 이해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자유주의 사회라는 것도 시장의 명령이 국가권력을 통제하고, 국가권력이 주권자인 국민이 아니라 시장의 눈치부터 보면서 시민사회를 통제하는 사회, 그래서 돈과 권력과 말의 관계가 반민주적 방향으로 조직화되는 사회가 아닌가 합니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어떻게 시민사회가 활성화되어 국가에 대해, 그리고 시장에 대해 통제력을 발휘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신자유주의 기업사회의 일그러진 공공성을 바로잡는데 관건이 되는 과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흔히 우리 사회는 급속한 근대화 와 동시에 민주화도 일정 수준으로 이루어낸 모델로 거론되곤 하는데, 거기서 시민사회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았나 합니다. 역사적 맥락이나 혹은 동아시아의 다른 사회와 비교해 보았을 때, 한국 시민사회나 시민운동의 특징은 어디에 있을까요?

**김동춘** 한국의 시민사회의 전사(前史)는 저항운동이었고, 이 저항운동의 주역은 지식인과 민중의 결합이었죠. 시민사회의 담지자는 전통사회에서 1980년대까지는 학생과 지식인들이었죠. 지식인이 시민사회의 대변자였고, 지식인들의 담론이 대중의 참을 수 없는 고통과 결합되어 폭발하는 것이 한국의 전통적인 저항의 특징이었지요. 이런 저항의 패턴이 조선말 민란에서부터 시작하여, 87년 6월 항쟁까지 왔다고 봅니다. 그 이후 지금에 와서 달라졌고요. 우리의 경우 봉기와 저항의 전통이 조선 후기부터 굉장히 강했는데 …… 왜 이렇게 강했을까요?

문화적으로 본다면 지식인들의 말하자면 도덕주의나 공공 지향성이 강했다는 점을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유교적 가치가 지배 이데올로기를 정당화하는 측면도 있지만 동시에 지배체제를 왕도정치의 관점에서 비

관하는 측면도 강했으니까요. 그리고 대중들의 경우에도 유럽의 봉건주의에 비해 상대적으로 조선시대 백성들의 지위가 높았다고 봐요. 유럽의 봉건시절에 농노나 노예들은 인간이 아니었는데, 우리는 적어도 유교 국가에서는 그렇지 않았어요. 평민이 지위가 꽤 높았다고 봅니다. 지위가 높았던 평민들이 가지고 있었던, 권리의식은 아니지만 강한 평등주의 지향이라고 할까, 이런 것이 저항의 자원이 되었다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는 중앙집권적인 권력체제가 갖는 특징도 작용한 것 같아요. 중앙집권적 체제가 피억압자들의 저항을 체제로 흡수할 수 있는 유연성이 굉장히 떨어지고 포섭할 수 있는 폭이 좁기 때문에, 대체로 저항이 참고 참다가 마침내 폭발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지요. 그 다음에 권력자들이 조선시대 이후 식민지 시기까지 항상 억압적이고 약탈적 성격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저항을 촉발시킨 점도 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지배 엘리트가 언제나 사적 이익의 추구자들이었고, 진정한 의미의 공화국이 한국사에서 존재한 적이 없었고, 한 번도 권력 엘리트가 백성과 국민들에게 존경받은 적이 없었으며, 적어도 존경받는 사람은 항상 재야에 있었다는 것, 이런 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과 비교해보자면, 일본은 위로부터의 근대화를 추구했고 기본적으로 우익이나 군국주의적 근대화 세력들이 그래도 일본의 애국자들이었고 이를테면 나름대로 존경받을 수 있는 세력이었던 데다 봉건제 전통이 있었기 때문에, 일본에선 시민사회적 저항의 전통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중국의 경우 저항의 전통은 있었지만 한국 사람들에 비해 상업적이고 실리적인 측면이 훨씬 강했지요. 우리는 유교문화의 변방에 있었지만 도덕주의나 명분주의가 훨씬 강했고요. 그리고 명분주의가 체제를 정당화하는 측면과 저항의 동력이 되는 측면을 모두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점에서 우리는 중국이나 일본과 다른 점이 있었어요.

우리사회에서 시민사회라고 하는 것이 나타난 시기는 맹아적으로는

해방 직후이고, 본격적으로는 4.19 직후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50년대 후반에 서울에서 이틀테면 저항적 공론장이 형성됩니다. 58년 선거에서 서울에서 민주당 14명이 전부 당선되고, 도시 중산층, 그러니까 교육받은 층이 반이승만 여론을 형성하게 되는데, 이것이 결국 4.19 학생봉기의 촉발제가 되지요. 마찬가지로 6월 항쟁 때도 1985년 이민우 파동 등을 거치면서 일종의 저항적 공론장이 형성되고 이것이 나중에 87년 민주화로 연결이 되었죠. 그래서 지식인과 피억압 대중이 결합하여 저항 세력을 형성하는 패턴이 조선후기 이래 계속 이어지면서 다른 아시아 나라에 비해 우리의 시민사회에 강력한 투쟁의 전통이 형성된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박영도** 한국의 역동적 시민사회의 역사적 맥락에 대해서 말씀해주셨습니다. 시민사회가 한동안 위축되었다는 이야기도 있었지만, 최근 시민운동가 출신인 박원순 변호사가 서울시장이 되면서 시민사회 혹은 시민운동이 새로운 단계에 진입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와 관련해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김동춘** 역사적으로 따지면 YS정권 때 경실련이 제창했던 정책방향을 YS가 수용한 것을 저는 더 중요한 계기로 보고 있습니다. 금융실명제, 토지공개념, 정부의 투명성 문제, 인물과 정책 차원에서 시민사회의 요구가 제도로 흡수되는 과정은 이미 90년대 초반부터 시작되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2000년, 2004년의 낙천, 낙선운동이 시민정치의 맹아를 이미 보여주었지요. 그 때는 네거티브 운동이기는 했어요. 그래도 시민정치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이 당시의 시민정치는 시민운동이 직접 후보를 선출하는 정치가 아니라 정당의 후보를 비토하는, 즉 기존 정당정치의 공백을 메우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해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

이 이제 시민운동가 박원순이 직접 시장이 되는 것까지 연결이 된 것이지요. 그러니까 기존 정당정치가 자리를 못 잡았고, 정당의 대표성이 약하고, 정당이 공론장의 역할과 공적 기능을 제대로 못하는 상태에서 공적 기능을 시민사회가 해왔던 거죠. 어떤 점에선 시민사회가 과잉 대표된 측면도 있어요. 선거에 의해 대표되지는 않지만 도덕적 대표성을 어느 정도 가졌던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민주화 20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당이 공적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공간을 외인부대인 시민사회가 채운 것인데, 이것이 과거에는 단순히 정책으로 연결이 되거나 또는 낙천, 낙선운동 같은 네거티브의 운동의 형태로 이루어지다가, 이제는 제도정치에 직접 들어가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거죠. 물론 아직까지 서울시장이라는 자리가 정치가보다는 행정가의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말입니다. 20년 동안의 시민운동의 축적과정에서 나타난 변화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지요. 이 변화의 저변에 있는 일관된 배경은 정당정치의 부재이고요. 즉 정당에서 나름대로 훈련되고 대표성을 가진 사람이 나와야 되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못함으로써 계속 바깥에서 수혈이 된 셈이죠. 따지고 보면 안철수 현상도 그런 거죠. 이 현상이 계속되는 것 같아요.

**박영도** 공론장이라는 것에는 비공식적, 비제도적 공론장이 있고 또 제도적 공론장이 있는데, 의회나 정당 같은 제도적 공론장이 국가기구화 되면서 공론장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다보니 시민사회 쪽에서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김동춘** 그러나 최근에는 90년대 말, 2000년대 초에 시민사회와 시민운동이 가졌던 역할이 상당히 많이 축소되었죠. 앞서 이야기한 기업사회의 등장으로 이익집단의 역할이 더 두드러지게 되었고, 사회가 더 사사화

되고, 사회적 영역이 더 축소된 것이 중요한 사회적 배경인 것 같아요. 그렇게 됨으로써 오히려 시민운동은 더 위축되어가는 측면이…….

**박영도** 방금 말씀하신 것이 어떤 점에선 현재 우리 시민사회나 시민 운동이 직면한 당면 문제라고 볼 수도 있겠군요.

**김동춘** 가장 큰 도전은 바로 공공성, 공적 부분에서 헌신하려는 사람이 현저히 줄어들게 되고, 이익집단의 역할이 과거에 비해서 훨씬 커졌다는 점입니다. 저는 특히 2000년 의약분업이 결정적 계기였다고 생각하는데요, 의사들이 집단행동을 함으로써 그 때 시민운동이 가졌던 역할을 압도하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지역 이기주의가 지역 시민운동이나 지역 미디어의 역할을 압도하는 현상을 곳곳에서 볼 수가 있지요. 넘비현상, 핵폐기물, 방폐장 문제를 둘러싼 지역 이기주의 같은 경우도 지역의 공론장이나 지역 시민사회의 역할이 현저히 축소되고 지역 이기주의가 그것을 훨씬 압도하는 현상이지요.

**박영도** 시민사회 영역도 중앙에 비하면 지역이 상당히 약한…….

**김동춘** 훨씬 약하지요.

**박영도** 시민사회의 역동성이 그런 이익집단이나 지역 이기주의의 힘을 극복할 수 있는 전망에 대해선 어떻게 보십니까?

**김동춘** 저는 지역의 활성화가 지역 시민사회에 굉장히 중요한 우선 변수라고 보는데, 지역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라도 중앙정치가 변해야 하는 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론적으로 보면 지역이 강해져서 중



양권력이 분산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지역의 숨통을 조이고 있는 것이 다 중앙정치거든요. 한 예를 들면 지방자치단체가 조그마한 예산을 집행하려 해도 다 행정안전부의 결재를 받아야 해요. 그러니까 독자적으로 지출할 수 있는 예산이 거의 없어요. 현실적으로 지방정부나 지방정치가 할 수 있는 독자적인 선택권이 거의 없고, 중앙관료들이 지방정부에 권한을 거의 넘겨주고 있지 않아요. 그 배경엔 중앙관료의 이해관계도 있지만 시장주의도 있어요. 특히 김문수 지사 같은 사람이 말하는 이른바 “낙수효과”, 즉 수도권 규제를 풀고 여기에 외국기업이 많이 들어와 돈이 생기면, 떡고물이 밑으로 떨어진다는 이론이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지방경제가 위축이 되고, 그렇게 되면 지방에 있는 시장이나 군수가 출신 당에 상관없이 자기들이 살기 위해 세수를 확보해야 하니까, 이른바 토건세력하고 손을 잡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역 사회에서는 공론장이 더 위축되는 역설적 현상이 일어나게 되죠. 그게 일본과 한국에서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중앙정치가 바뀌어야 지방이 살게 되고, 또 지역경제가 살아야 지역 시민사회도 활성화되는 거죠. 이게 우리사회에서 큰 문제입니다. 그나마 중앙정치에선 그래도 대항세력이 약간의 힘이 있는데, 지방에 내려가면 숨도 못 쉬고 꿈쩍도 못하는 것이죠. 미디어도 없어요, 소통도 안 돼요.

**박영도** 지방 토호들이 상당히 강해서…….

**김동춘** 예, 지방 토호들이 다 지역신문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에서는, 예를 들면 그 사람들 하는 이야기가, 사람 한 사람이 죽어도 신문에 나는데 거기는 열 사람 죽어도 신문에 안 난다는 거예요. 그런 것하고 비슷한 것이에요.

## 교육과 공공성

**박영도** 지금까지 국가, 시장, 시민사회와 관련된 공공성의 상태에 대해 진단하고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공공성의 문제가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분야의 하나가 교육분야가 아닌가 합니다. 그리고 또 교육은 국가, 시민사회, 시장에게 인적 자원과 함께 여러 담론적 자원도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동춘** 우리나라에서는 교육이 공공성에 미치는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교육이 기본적으로 보편적 가치를 지향하고 있고, 사적 이익보다 공적 대의에의 헌신을, 배운 사람의 사회적 책임을 굉장히 강조하는 전통을 가지고 있잖아요. 물론 현실적으로는 교육이 입신출세 교육이었고, 조선시대 때도 90%는 입신출세 교육이었다고 생각이 돼요. 공부를 하는 것이 대체로 과거 시험을 준비하기 위한 것이었고, 과거 시험을 준비하지 않는 학자, 지식인은 극소수였지요. 퇴계 선생 같은 분도 “내가 부모봉양만 아니면 과거시험 안 보고 그냥 공부하고 싶었는데, 부모봉양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관직에 나갔다”고 하셨죠. 관직에 나간다는 것이 곧 먹고 살기 위한 길이었으니까요. 하여튼 적어도 선비의 90% 이상은 과거시험을 봤고, 과거시험을 본다는 말은 세속적 입신출세와 교육이 연결이 되었다는 말이죠. 하지만 그런 현실적 동기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도 교육 자체가 갖는 보편적 성격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어요. 비록 입신출세를 위해 교육을 받았지만, 교육의 공식적인 목표는 공공적 인간을 양성하는 것이지요. 일본 식민지 시기도 마찬가지였어요. 교육의 공식적 목표는 공공적 인간을 양성하는 것이지만 교육과 학교의 실제적 운영은 사적 인간을 더 장려하는 입신출세 지향적이었던 괴리가, 형식적 가치와 내용 간의 괴리가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대체로 90%의 청년들은 결국 입신출세의 사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도구로서 교육을 받아들이지만, 그래도 그 중에 일정 정도는 공적 관심을 갖는 지식인으로 길러지지 않았습니까? 자본주의 이전에는 외국에서도 성직자 같은 엘리트 층을 양성하는 것이 고등교육의 기본 목표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지요. 국가관료, 지배 엘리트를 양성하고, 지배 이데올로기를 내면화하고 전파하는 것이 교육의 기본 역할이었지요. 그런데 국가가 공공성과 괴리되는 상황 속에서, 입신출세를 위한 교육방향과 지배 엘리트를 양성하려는 교육의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교육의 보편적 가치 때문에 이단아가 계속 나타나게 된 거죠. 일제시대 때 출세하려고 일본유학 갔다가 새로운 사상에 몰들어 돌아오는 것도 그런 사례죠. 하여튼, 근대 교육의 역설적 효과 또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라고나 할까요, 아니면 부르디외 식으로 일종의 교육의 자기 파괴적 유토피아라고 할까요, 그런 현상이 계속 나타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 공식 교육은 체제에 순응하는 인간을, 그러니까 부모에게 효도하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입신출세를 지향하는 인간으로 길러내는 것 같아요. 하지만 역설적으로 그것에 대항하는 저항적 공공성을 지향하는 사람들도 동시에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전근대에도 그렇고, 근대에 그렇고, 이것이 우리 사회의 일관된 교육의 효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박영도** 네, 교육이 입신출세 지향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의 보편적 가치에서 비롯된 “의도치 않는 결과”로서의 교육효과가 있었다는 말씀이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런 교육효과를 봉쇄하려는 경향이 등장하고 있지 않나 합니다. 대학의 기업화 경향이 그것인데요. 이 경향 속에서 시민사회의 재생산 가능성은 어떻게 확보할 수 있고, 또 대학의 기업화 경향 자체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요?

**김동춘** 저도 최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것이 90년대 초 한국에서 학생운동의 소멸과 중요하게 연동되어 있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저는 학생운동이 1991년 강경대 사건 이후 거의 소멸되었다고 보는데, 여기서 소멸은 대학생들이 공적 지식인으로서 역할을 하던 시대가 끝났다는 것을 뜻해요. 동시에 그것은, 주요 대학의 입학 여부가 부모의 사회적 지위 및 부와 상당한 상관관계를 갖는다는 것이 보여주듯이, 이른바 SKY 대학의 공적 기능의 실종을 뜻하지요.

국립 서울대학교의 공적 기능은 애초에 약했어요. 국립 서울대학교의 공적 기능을 든다면 두 가지를 들 수 있죠. 첫 번째는 사립대학에선 당장 돈이 되지 않기 때문에 회피하는 학과와 학문을 계속 유지하고, 연구소를 만들고, 연구 인력을 길러내는 공적 측면이 있고요. 두 번째는 복지적 측면이죠.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사립대학에 가지 못하는 가난한 집 아이들을 국립 서울대학뿐만 아니라 국립대학이 흡수해주는 역할이죠. 이런 복지적 기능이 80년대까지는 약하기는 했지만 어느 정도 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서울대 등록금이 정확히는 몰라도 사립대학의 거의 3분의 2 이상 되는 것 같아요. 거의 비슷해졌어요. 70년대만 하더라도 국립대학은 큰 돈 들이지 않고 다닐 수 있는 상황이었지요. 그런데 이제 공적 측면에서의 복지적 기능이 없어진 거죠.

게다가 사립대학처럼 돈 되는 것은 다 하는 식의 대학운영 방침이 국립대학에까지 수용되면서 국립대학의 공적 기능이 쇠퇴일로에 있어요. 그리고 대학이 기업화되면서 대학 내 학생문화의 학술적 성격, 참여적 성격, 정치적 성격 자체가 파괴되고 이와 함께 학술 동아리는 해체되고 학생들은 1학년 때부터 스펙쌓기에 골몰하는 양상이 벌어지고 있지요. 거의 일상화된 이 과정을 보면서 저는 공적 지식인의 양성소로서의 대학의 역할은 90년대 중반 이후에는 끝난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해요. 저는 공적 지식인의 양성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 시대적 화두라

고 봐요. 대학이 그 역할을 못한다면, 무엇이 어디에서 그것을 해야 할  
까? 이 문제에 대해 현재로서는 저도 답이 없습니다만, 하여튼 3.1운동 때  
부터 시작했던 근대 100년 전통이 87년을 기점으로 일정한 정도 매듭을  
짓고선, 공적 지식인의 양성과 대학의 연관성 자체가 굉장히 느슨해지  
고 있는 점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 공적 지식인의 의미와 역할

**박영도** 좀 우울하긴 하지만 이야기가 공공성 문제와 관련해 대단히  
중요한 측면인 공적 지식인의 문제로 넘어온 것 같습니다. 선생님은 한  
국의 대표적인 공적 지식인의 한 분으로서 다양한 역할을 해오셨습니  
다. 대학에서 비판적 지식인으로서 활동하셨을 뿐 아니라 진실화해 위  
원회를 이끌어 가시면서 제도적 영역 안에서도 비판적 문제의식을 실현  
했던 귀중한 경험을 갖고 계십니다. 이런 다양한 체험을 하시면서 공적  
지식인의 의미와 역할에 대해 많은 생각과 느낌을 갖고 계시리라고 생  
각합니다.

**박영도** 좀 우울하긴 하지만 이야기가 공공성 문제와 관련해 대단히 중  
요한 측면인 공적 지식인의 문제로 넘어온 것 같습니다. 선생님은 한국의  
대표적인 공적 지식인의 한 분으로서 다양한 역할을 해오셨습니다. 대학  
에서 비판적 지식인으로서 활동하셨을 뿐 아니라 진실화해 위원회를 이  
끌어 가시면서 제도적 영역 안에서도 비판적 문제의식을 실현했던 귀중  
한 경험을 갖고 계십니다. 이런 다양한 체험을 하시면서 공적 지식인의  
의미와 역할에 대해 많은 생각과 느낌을 갖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김동춘** 저의 활동기록들을 사람들과 공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책으로 써서 출간할 예정인데요, 박영도 선생도 마찬가지로, 학문하는 것 자체가 공적 성격을 가지고 있잖아요. 무언가 세상을 이롭게 하려는 지향이 있죠. 물론 잘나가는 분야를 공부해서 돈도 많이 벌고 잘 살려는 지향을 가진 사람들도 있지만, 대체로 학문하는 사람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 공적 지향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우리 사회에서 어두운 부분, 사람들의 시선이 미치지 않는 부분, 대변되지 않는 목소리, 사회적으로 대표되지 않는 사람들, 억울한 사람들의 목소리, 이런 것을 글로 써야 되겠다는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었고, 어느 정도는 그렇게 해왔어요. 그러다가 『전쟁과 사회』라는 한국전쟁에 대한 책을 썼어요. 한국전쟁에 대한 공식 담론의 냉전 이데올로기를 비판하는 책입니다. 한국전쟁의 다른 측면, 즉 학살의 측면과 전쟁의 계급적 성격의 문제, 그리고 전쟁의 내재화를 통해서 지금 한국사회에서 전쟁이 어떻게 재생산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일종의 전쟁의 정치사회학적 측면을 밝히려고 한 것인데, 여기엔 학문적 동기도 있지만 동시에 나름대로의 정치적 동기가 있었지요. 정치라는 것이 꼭 파당적 의미의 정치가 아니라 넓은 의미의 폭로와 비판, 이런 측면이 있는 거니까요.

이 작업을 하다가 피학살 유족들을 많이 만나게 되었는데, 그 사람들이 저에게 자신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주기를 간절히 요청했고, 저도 그것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정부에까지 들어가서 공무원으로서 그 역할을 하게 되었고, 바깥에서는 사회운동을 했죠. 물론 제가 전에 참여연대를 만든 사람 중의 하나이니만큼 시민운동을 했죠. 어쨌든 그런 활동을 하면서,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먼저 안 사람의 책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을 나름대로 하려고 했죠. 물론 그렇다고 그 일에 완전히 헌신했다는 할 수는 없지만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 사회에서 수많은 억울한 사람들의 억울함을 푸는 문제, 이른바 과거사

청산과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 인권침해와 국가폭력의 문제를 다루었어요. 국가폭력의 희생자들과 희생자를 양산하고 있는 시스템을 보여줌으로써 추후에 그런 피해자들이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이죠. 이런 일을 학자로서 논문을 통해 할 수도 있고, 언론에 칼럼을 써서 이 문제를 대중화시키는 공적 지식인의 역할도 있겠고, 그 다음에는 조직가나 활동가로서 사람들을 조직하는 역할도 있을 텐데, 이 역할들을 약간씩은 다 했죠. 실제 단체를 만들고 운영하는 역할, 칼럼 같이 쉬운 말로 풀어서 문제를 대중화하는 역할, 그리고 논문으로 학계의 사람들에게 이런 분야를 계속 연구하도록 촉발시키고 이런 분야의 중요성을 알리는 역할, 이 역할들이 약간씩은 다 결합이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공무원이 되어서는 또 다른 역할을, 즉 운동의 과제를 이제 정부에 들어가서 직접 집행하는 역할까지 했죠. 그러니까 행정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명예회복과 보상을 줄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하는 작업까지 한 거죠. 이로써 국가가 하지 못한 시민사회적 역할에서부터 국가의 한 에이전트로서의 역할까지 두루 해 본 셈이죠. 그러나 이 진실화해위원회 같은 기구가 半국가기구이다보니, 기존의 정부기구는 그것을 국가기구로 인정해주지 않아요. 민간에서 온 놈들이 우리가 준 자료를 언제 빼갈지 모른다면서 자료도 주지 않아요. 우리가 뭘 믿고 당신들을 같은 파트너로 인정하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민간이 만든 국가기구이기는 하지만 한시적 기구이기 때문에, 국가 내에서는 계속 따돌림을 받는 국가기구였죠. 국가인권위원회와 비슷하게, 이를테면 국가 내 시민사회 같은 것이었어요. 그러면서도 이것이 국가기구다보니 시민사회로부터는 뭔가 비판을 받게 되죠. 그런데 국가기구는 법적인 한계 범위 안에서만 활동해야 되기 때문에, 시민사회처럼 마음대로 자기 발언을 하지 못하는 족쇄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다 경험을 한 셈이죠.

**박영도** 공적 지식인으로서 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유형들을 두루 거치셨습니다.

**김동춘** 거의 다 해봤죠.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한 거예요, 사실.

**박영도** 어느 것이 가장 효과적이었던 것 같습니까?

**김동춘** 역시 바깥에서 떠드는 것이 가장 자유롭죠. 그러나 역시 실권을 갖고 집행을 하는 경우 바깥에서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어요. 강제력을 바탕으로 하니깐요. 그러니까 내가 연구자로서는 10년을 노력해도 모을 수 없는 자료를 거기서는 기관에 요청을 하면 자료가 오는 겁니다. 그 자료를 내가 볼 수 있는 거예요. 따끈따끈한 현장 자료를. 그것은 국가권력이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양날의 측면이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한편으로는 과연 이런 과거사 청산 문제를 반드시 국가기구를 거쳐서 해결해야 하는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국가기구를 통해서 할 때는 그것이 정치화되거든요. 그리고 정치화 되면 애초의 대의가 변질되는 측면이 있고요. 하지만 시민사회에서 하면 도덕적 명분은 강한데 실행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상적 거버넌스를 만들 수 있을까가 문제인 거죠. 위원회라는 조직의 한계이기도 해요. 위원회 정부라는 비판도 많이 하잖아요? 한시적 위원회가 기존의 국가기구를 견제하고 감시하고 개혁하는 효과가 있지만, 그 효과가 한시적이기 때문에, 기존의 상설 국가기구와는 동등하게 대결할 수 없는 딜레마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작업을 상설 국가기구, 즉 법무부나 행정안전부가 하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바깥에서 일종의 외인부대가 들어가서 계속 싸워가며 해야 하는가 하는 아주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요. 학술논문으로 쓰면 박



사논문을 한 10개 쓸 정도로 사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박영도** 개인적인 체험들도 들어보고 싶은데요, 혹시 여러 활동을 하시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김동춘** 제가 원래 박사논문에서 노동문제를 다루다보니 노동자들도 많이 만났고, 그 후엔 피학살 유족들을 만났는데, 우리 사회에서 시민권을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기주의를 굉장히 뼈저리게 체험을 했지요. 그런데 이기주의는 약자들의 이기주의만 있는 것이 아니라 관료들이나 공무원들도 다 사적 이익에 의해 움직이는 존재들이죠. 우선 관료들은 승진에, 판사들은 나중에 옷 벗은 다음 전관예우에 관심이 많지요. 그러니까 국민의 녹을 먹는 사람들의 주된 관심사가 녹을 먹는 기회를 활용해서 어떻게 사적 이익을 채울 것인가에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한국의 엘리트나 이른바 공공 부문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국민의 세금으로 사는 사람들이 다 자기 잇속 챙길 공리만 하면, 약자들의 억울함은 누가 대변하느냐 이겁니다. 학자들도 마찬가지죠? 학자들도 인기 없는 주제는 공부 안하죠? 나중에 뭔가 만들어져서 연구 프로젝트 많이 생기면 모여들지만, 그러기 전에는 거의 관심을 안 갖죠?

이렇게 기존 엘리트들이 사적 이익에 의해 움직인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민중들은 더 이기적이 되는 겁니다. 내 것 내놓으라는 거죠. 남들이 고통 받을 때는 연대하지 않고 있다가, 내가 고통 받을 때는 왜 내 고통을 외면하냐고 울부짖는데, 겉으로 드러나는 피해자들의, 유족들의 이기주의는 참 견디기 어려워요. 그런데 앞서 말했듯이 열쇠는 이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지요. 사실은 위에 있는 사람들이 공적 모습을 보여주어야 밑에 있는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변하는 것인데, 우리나라

라 민중들은 평생을 속아오기만 했어요. 그래서 콩으로 메주를 쏜다고 해도 안 믿는 거죠. 이해를 하지요. 하지만 그 사람들하고 직접 부딪혀 보면 무지하게 피곤한 거예요. 바닥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무서운 이기주의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이게 참 큰 과제죠. 결국 우리 사회에서 약자들은 100% 자기 가족과 자기만을 위해서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도 10% 정도는 공인으로서 생각을 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물론 그 중에는 10%가 아니라 50% 이상 공인으로서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얼마 전에 한겨레신문에서, 비정규직으로 정리되고 된 사람이 조그만 자기 일을 하면서 한 푼 두 푼 시민단체에 계속 후원한 기사를 보았어요. 어떻게 보면 오히려 없는 사람들 중에서 자기 이웃에 대해 헌신적인 사람들이 더 많을지도 몰라요. 배울수록 경쟁적이고 이기적인 인간이 되니까요. 평균적인 국민들이 약간이라도 공적인 부분에 대해 관심과 열정을 쏟을 수 있게끔 바뀌어야 사회가 바뀔텐데, 그럴려면 적어도 위에 있는 사람들이 아주 엄격한 일종의 직업윤리를 갖고 있어야 한다고 봐요. 직업윤리라는 것이 우리로서는 참 어색한 개념인데, 전 직업윤리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의사들이나 법조인들처럼 특히 사람의 생명을 좌우하는 사람들에게는 엄격한 직업윤리가 요구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이 확보되어야 밑의 사람들이 따라 갈 것 같아요. 법에 대한 신뢰도 이때 생기겠지요.

**박영도** 오랜 세월동안 다양한 형태의 공적 지식인 역할을 수행하셨는데, 역사적으로 공적 지식인들의 역할과 과제에 변화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선생님의 경우도 80년대와 그 이후의 90년대, 그리고 97년 이후, 또 현재의 상황이 다를텐데요. 공적 지식인의 역할에 있어서 중요한 시대적 변화가 있었다면 무엇일까요?

**김동춘** 많이 달라졌지요. 마이클 뷰러웨이(Michael Burawoy)가 말하는 학자 혹은 지식인의 네 가지 역할을 그대로 차용해서 이야기하면, 비판, 이론 수립, 이데올로그(공공 지식인), 정책, 네 가지가 있지요. 군사독재나 폭압적 체제와의 투쟁이 필요했던 시절에는 비판과 이데올로그의 역할이 중요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에선 리영희 선생님이 그 전형적인 인물이지요. 체제의 허구성을 뒤집어 드러내 사람들을 각성시키는 계몽적인 역할과 사람들에게 방향을 제시하는 예언자적 역할을 한 분으로는 함석헌 선생 같은 분이 있지요. 비판과 이데올로그의 역할이 그 시대에는 필요했다고 봐요. 그런데 민주화가 된 이후에는 그런 역할이 없어진 것은 아니지만, 이론과 개념을 만드는 역할, 이데올로그들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밀받침을 해주는 역할, 그리고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만드는 작업이 중요해요. 지금은 이 두 가지 역할이 앞의 두 역할에 비해 훨씬 중요한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가 차분하게 앉아 벽돌 쌓듯이 이론과 정책을 다듬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예전에 비해 제도정치로 무게중심이 옮겨지고, 사법의 역할이 중요해진 시대에는 입법자들이 입법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주는 정책기능과 이론적 기능이 중요하지요. 그래서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 우리 사회는 이 두 가지 역할을 공적 지식인들이 어떻게 담당할 것인가에 의해 상당히 좌우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은 미디어가 전통적인 지식인의 역할을 압도하는 시대가 때문에, 미디어가 사실 의제까지 설정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미디어를 타지 않는 공적 지식인의 역할이 더 왜소화된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미디어는 말 그대로 미디어고 전달 매체이지요. 고속도로를 깔아봐도 차가 없으면 뭐하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콘텐츠를 만드는 역할, 즉 앞서 말한 두 가지 역할이 없다면 미디어는 작동되지 않는 거죠.

그렇다면 그 역할을 담당할 단위가 무엇이여야가 문제인데, 여기서도 사사화의 영향, 기업화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어요. 예를 들면 삼성경제연구소가 노무현 정부의 의제설정 기능을 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지않아요? 그러면 삼성경제연구소에 대항할 수 있는 공적 연구소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하는 문제가 떠오르죠. 우리가 기업의 이해관계의 비전이 아니라 사회와 국가의 장기적 비전을 만들어낼 수 있는 정책연구의 단위가 만들어져야 할 것 같아요. 그런 정책연구 단위와 지식인들의 다양한 연합체들이 여기저기서 만들어져서 장기 비전에 관한 담론들을 산출하는 역할을 해야겠지요. 대학의 기능이 굉장히 후퇴하긴 했지만 대학이 이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대학의 공적 기능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박영도** 지식인 역할의 조직적 차원인 연구소에 대해, 시민사회나 공적 지식인들의 공적 관심사들을 모으고, 집약할 수 있는 공적 연구소에 대해 말씀해주셨습니다. 다른 한편 활동내용과 관련해서 볼 때, 공적 지식인들이 풀어야할 문제는 대체로 인문학적 요소와 사회과학적 요소가 결합된 문제가 아닌가요 합니다. 선생님의 체험을 통해 보실 때, 공적 지식인의 역할에서 인문학자와 사회과학자들의 협력 관계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또 어떤 모습이 바람직하다고 보시는지요?

**김동춘** 저는 거기에서 한 가지 추가하고 싶은데요, 자연과학하고도 결합되어야 한다고 봐요. 요즘 말하는 통섭인데요,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이 결합되어야 하고, 또 자연과학과 인문학도 결합되어야 하지요. 이 세 가지가 함께 결합되어야만 완성된 지식이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사회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인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역사는 사회과학의 거름이고 역사 연구가 없이는 사회과학이 꽃을 피울 수 없다고 봐요. 또 철학적 깊

이가 없이는 사회과학적 혹은 정책적 대안이 깊은 내용을 갖지 못하고, 대중요법 정도로 그칠 수 있지요. 그래서 철학과 역사에 바탕을 둘 때 사회과학이 힘을 갖고 또 현실적합성을 지닌 정책대안이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이론은 아이디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축적물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이죠. 철학적 언사 몇 개 가지고 이론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인문학과 사회과학이 결합해야 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의 한국 대학의 학과(department) 체제가 혁파될 필요가 있어요. 특히 사학만 보더라도 60년대 말, 70년대 초 서울대에서 국사학과, 동양사학과, 서양사학과가 분리되는데, 이것은 순전히 교수들 밥그릇 문제와 관련되어 있어요. 그 부정적 효과가 바로 국사 연구하는 사람은 한국사만 하고, 동양사 하는 사람은 중국, 일본사만 하는 것이죠. 1894~95년의 청일전쟁을 알려면 그때 일본에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함께 알아야 하는데, 이것을 모르니까 도대체 지적 불구자들이 서로 자기가 많이 안다고 주장하는 꼴이 되는 거죠. 사학 내부에서만도 그러한데, 사회과학 차원에서는 더 말할 것도 없죠. 사회학과 사회복지는 당연히 같이 가야 되는 것이고, 사회정책이 사회학과 떨어진다고 해도 사실 웃기는 일인 거죠.

그리고 인문학과 사회과학은 자연과학과도 결합되어야 해요. 지구환경 문제나 에너지 문제, 식량 문제 등은 정치적 문제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이 문제들은 자연과학이나 사회과학만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지적 통섭이 이루어져야만 문제를 풀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의제들이 다가오고 있어요. 이런 점에서, 자기 밥그릇 챙기기에 바쁜 현재의 우리나라의 분과학문 체제가 학문발전에 심각한 질곡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요. 현재와 같은 상태에서는 좋은 학문이 나오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특히 사회과학은 사실상 완전 식민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태니까요. 인문학이 그나마 다소 국적성이 있지만, 인문학은 폐쇄적 민족주의의 틀

을 별로 못 벗어나는 한계 때문에 보편적 지향을 갖고 있지 못하지요. 물론 철학하는 김상봉 선생처럼 이런 한계를 넘어서 한국의 철학과 서양의 철학을 결합시키려고 하는 몇몇 선생님들의 좋은 시도들이 있기는 하지요. 그러나 지금의 제도권 학계에서 과연 뭔가 창의적인 학문발견이 일어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저는 대단히 회의적이에요. 뭔가 새로운 학문운동이 필요하고, 이것을 결합하는 통섭적인 부분이…….

**박영도** 그게 어떤 모습일 수 있을까요?. 아까 말씀하신 연구소 같은 …….

**김동춘** 뭔가 학문 단위가 필요할 것 같아요, 제도권 바깥에서 말입니다. 바깥에서 시작하여 제도로 들어오면 좋죠. 제도를 다시 바꾸는 자극제가 될 수 있으니까.

**박영도** 흥미롭고도 중요한 문제인데, 시간 제약 때문에 아쉽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폭력적인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 경험을 미루어 볼 때 우리 시대의 공적 지식인이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김동춘** 지금은 과거처럼 예언자적 비판의 시대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천안함 사건에서의 의문점을 자기가 갖고 있는 자연과학적 지식과 논리를 동원하여 논증했던 이승헌 교수나 서재정 교수 같은 활동, 삼성 백혈병 문제를 의제화한 의사 공유정옥씨 같은 역할이 필요하다고 봐요. 과학적 기반 위에서 정부의 입장을 반박하며 진실을 규명하는 활동, 사회에서 정말 중요한 의제에 대해, 모든 사람들이 알고 싶어 하고 또 모두가 알게 되면 사회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될 의제에 대해 자신의 학문적 전문성에 기초하여 이론적, 정책적 분석 작업을 하는 사람이 바로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공적 지식인이 아닐까 합니다.

지식인이란 4대강 문제와 같이 지금 따끈따끈한 주제를 물고 늘어져야 해요. 쟁점이 되는 주제를 붙들되 자신의 전문성을 가지고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고 양심적으로 본 것을 그대로 펼쳐서 대중들과 호흡을 같이 하면서 전체적인 담론지형이나 정책지형을 바꿀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미디어 종사자들 중에서도 황우석 문제를 즐기차게 파고들어 그것을 밝혀냈던 MBC PD 같은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도 중요한 공적 지식인이라고 생각해요.

**박영도** 전문성과 공공성, 현재의 사회적 의제의 결합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김동춘** 예. 지식인이 공공적 역할을 수행하려면 엄격한 책임윤리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자기 분야에서 전문적 지식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공적 역할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공공성과 전문성은 반드시 현재의 실천적 과제에 대한 응답을 내용으로 해야 합니다. 극히 추상적이거나 현학적 지식은 나름대로 공공적 역할을 할 수는 있으나 지금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답을 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받은 땅이 디디고 있되, 공적인 지향과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전문지식으로 문제에 대해 응답을 해야 합니다.

**박영도** 네, 장시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김동춘** 고맙습니다.

